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복지행정혁신분야

*Welfare Evaluation of Local Governments 2007:
Areas for Administrative Improvement*



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중앙정부 중심의 복지정책이 대폭 지방으로 이전되고 복지재정이 분권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복지수준을 파악하고 이를 증진시킬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복지행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피드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역량을 강화시키려는데 있다.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중 복지행정혁신분야는 총 3개영역의 9개지표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에서는 기관장의 조직개혁과 인사개혁을 위한 복지행정혁신역량을 증진시키고,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교육·훈련프로그램의 확대 및 복지관련 전문지식 등을 보강하며, 사회복지부서 내 전문인력 배치가 확대되어야 한다. 정보화역량영역에서는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극대화하되, 복지수혜대상자 대비 사회복지인력의 균형적 배치를 병행하며,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보급확대를 위한 지원에 주력한다.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에서는 지역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창의적·혁신적인 특화사업 개발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며, 특화사업의 재원마련을 위한 민간자원 개발에 지자체의 배가의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1. 들어가며

최근 국가의 균형발전, 지방분권의 강화, 복지정책의 지방이양 등으로 지역사회복지환경이 변화됨에 따라 지역사회복지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2005년부터 67개 사회복지사업 예산이 지방에 이양됨에 따라 사회복지부문에 본격적인 지방분권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사업법의 개정에 따라 기초 및 광역 지자체에서는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복지증

진을 도모토록하고 있다.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사회복지의 지역차원에서 주민의 주체적 관점으로 사회복지가 통합·전개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능동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사회적 인프라와 재정적 한계가 매우 크다. 즉, 지역별로 사회복지관련 인프라가 불균형적으로 설치되어 복지접근도의 편차가 크고, 지자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지방이양된 복지사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단체장의 관심 부족이 수반될 경우 복지서비스 제공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지역복지환경 하에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수준 평가는 지자체가 어느 정도 지역 특성에 부합되는 복지행정의 체계를 갖추고 있는가에 관한 체계적인 정보수집과 피드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복지행정 역량을 강화시키려는데 있다.

본고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¹⁾ 중 복지행정혁신분야를 중심으로 평가원칙 및 평가지표를 살펴보고, 평가결과를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평가원칙 및 평가지표

2007년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 중 복지행정혁신분야 평가를 위한 기본원칙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지자체 단체장의 조직과 인사 행정에서 개혁적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한다. 행정분권과 재정분권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지역실정에 알맞은 복지정책과 행정체계를 갖출 뒷받침을 마련하는 일은 조직과 인사개혁의 여부에 달려있다. 따라서 구·시·군 복지행정의 미션과 비전을 제시하고 각종 조직정비 작업과 더불어 복지전담공무원의 노하우를 극대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는 혁신과업에서도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둘째, 지자체 정보화 시스템의 활용과 보급으로 행정조직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유도한다. 지식경영 시대에 지자체 행정조직의 혁신과 역량강화는 조직구성원들이 어느 정도 정보화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이를 조직관리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정보시스템의 보급수준의 향상과 시스템 활용의 정도는 중요한 평가지표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주민밀착형 복지정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유도한다. 지자체 복지수준평가에서 특히 복지행정혁신분야에서 지역특화사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자체 복지행정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지역특화사업이 지역실정과 주민특성을 반영하여 혁신적인 특화사업을 합리적으로 기획하고 시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특화사업의 건수와 예산규모는 중요한 평가지표로 선정되었다. 한편 각종 사회복지서비스와 프로그램은 주로 지역의 민간기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것이 보편적이므로 민관의 협력사업 추진여부는 복지행정의 효과성과 효율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된다는 점에서 이러한 요소도 평가지표에 포함하였다.

위와 같은 원칙 하에 세 가지 평가영역을 대상으로 총 9개의 평가지표를 통해 복지행정혁신분야의 평가를 시행하였다. 먼저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은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

훈련참여 실적,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등의 총 4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은 4가지 사례 즉,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에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실시 여부, 구·시·군 산하 우수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포상제 실시 여부, 지역특화사업의 증가여부, 사회복지조직의 미션과 비전 제시 여부 등의 사례수를 측정하여 조직구조를 개편한 실적을 평가하였다.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은 4가지 사례 즉, 복지관련 포상건수가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10% 이상인지 여부, 공무원의 자원봉사실적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지 여부, 일반직 승진율 대비 사회복지직 승진율이 동일하거나 높은 지 여부, 복지직공무원 및 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해외연수의 실시여부 등의 사례수를 측정하여 어떤 형태의 인사개혁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평가하였다. 사회복지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은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중앙 및 시도, 구·시·군에서 실시하는 학계의 세미나, 워크숍, 학술대회 등 전문화된 교육을 어느 정도 받았는지를 평가하였다. 사회복지직 배치수준은 기초보장업무와 복지서비스업무의 기획은 사회복지를 전공한 공무원의 전문성이 높다는 전제하에 사회복지부서내 전체 공무원 중에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수준을 평가하였다. 정보화역량영역은 복지행정인력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등의 총 2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복지행정인력의 행정정보시스템활용률은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수급권자의 소득과 재산 상황, 가족관계의 변동에 즉시 대응하여 효율적

으로 대상자를 관리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지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행정정보시스템의 활용도를 평가하였다. 사회복지기관정보시스템활용률은 지자체 수준에서 관내 공공 또는 민간사회복지기관의 복지업무수행의 효율화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보화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사회복지기관의 수를 평가하였다.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은 특화사업 건수, 사회복지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민관협력사업 건수 등의 총 3개 평가지표로 구성되었다. 특화사업건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복지사업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계획되었고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사회복지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은 특화사업이 지자체의 핵심사업으로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정도의 예산투입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특화사업의 결산규모를 평가하였다.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민관협력체계의 구축과 활용이 지역복지의 역량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취지에서 민관협력사업이 어느 정도 체계적으로 계획되었고 수행되었는지를 평가하였다.

3. 분석결과

1) 평가내용의 종합점수

세 가지 평가영역을 중심으로 평가점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의 경우 기관장의 복지행정리더십, 복지행정인력

1) 2007년 지방자치단체복지종합평가는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동으로 2007년 5~6월에 전국 232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총 9개 분야(복지총괄, 복지행정혁신, 지역사회복지계획, 노인복지, 아동복지, 장애인복지, 기초생활보장, 자활, 의료급여)에 걸쳐 실시한 평가임.

표 1. 복지행정혁신분야의 평가지표 및 척도

평가영역	평가지표	척도	
복지행정혁신 역량	A1-1)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다음 a)~d) 각각에 O 또는 X로 체크하고, O의 개수를 파악	
		a)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실시 ()	
		b) 우수시설 포상제 실시 여부 ()	
		c) 전년대비 특화사업 증가 ()	
		d) 사회복지(조직)의 미션, 비전 등 제시 여부 ()	
		⑤ 4개 해당	
		④ 3개 해당	
		③ 2개 해당	
		② 1개 해당	
		① 해당사례 없음	
	A1-2)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	다음 a)~d) 각각에 O 또는 X로 체크하고, O의 개수를 파악	
		a) 복지관련 포상건수가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10% 이상 ()	
b) 자원봉사실적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근무평정에 반영 ()			
c) 일반직 승진을 대비 사회복지직 승진율이 동일하거나 높음 ()			
d) 복지직공무원 및 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해외연수 실시 ()			
	⑤ 4개 해당		
	④ 3개 해당		
	③ 2개 해당		
	② 1개 해당		
	① 해당사례 없음		
A2-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참여 실적	(교육·훈련 참여인원 수 ÷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 100		
	⑤ 95% 이상	• 교육·훈련 참여인원 수 ()명 •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명 • 교육·훈련참여 실적 ()%	
	④ 75~95% 미만		
③ 55~75% 미만			
	② 35~55% 미만		
	① 35% 미만		
A3-1)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 사회복지 부서 전체 공무원 수) × 100		
	⑤ 50% 이상	•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 ()명 • 사회복지 부서 전체 공무원 수 ()명 • 배치 수준 ()%	
	④ 40~50% 미만		
③ 30~40% 미만			
	② 20~30% 미만		
	① 20% 미만		

<표 1> 계속

평가영역	평가지표	척도
정보화 역량	B1-1) 복지행정 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갱신(update)된 DB 테이블 수 ÷ 전체 사용 DB 테이블 수) × 100
		⑤ 전국평균+10% 이상 ④ 전국평균+5~+10% 미만 ③ 전국평균±5% 미만 ② 전국평균-5~-10% 미만 ① 전국평균-10% 이하 ※ 본 지표는 복지부자료를 활용할 것이므로 기재하지 않음.
	B1-2)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정보시스템 사용기관 수 ÷ 해당 사회복지기관 수) × 100
		⑤ 100% ④ 80~100% 미만 ③ 60~80% 미만 ② 40~60% 미만 ① 40% 미만
지역복지특화 사업 역량	C1-1) 특화사업 건수	특화사업 건수
		⑤ 전국평균+80% 이상 ④ 전국평균+40~+80% 미만 ③ 전국평균±40% 미만 ② 전국평균-40~-80% 미만 ① 전국평균-80% 이하
	C1-2)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특화사업 결산액 ÷ 사회복지 결산액) × 100
		⑤ 전국평균+80% 이상 ④ 전국평균+40~+80% 미만 ③ 전국평균±40% 미만 ② 전국평균-40~-80% 미만 ① 전국평균-80% 이하
		• 특화사업 결산액 ()천원 • 사회복지 결산액 ()천원 • 비율 ()%
C2-1) 민관협력사업 건수	민관협력사업 건수	
	⑤ 전국평균+80% 이상 ④ 전국평균+40~+80% 미만 ③ 전국평균±40% 미만 ② 전국평균-40~-80% 미만 ① 전국평균-80% 이하	

의 질, 복지행정인력의 배치로 구분되며 기관장의 복지행정리더십은 17.5점 만점에 평균 12.37점, 복지행정 인력의 질은 8.75점 만점에 6.80점, 복지행정인력의 배치는 8.75점 만점에 6.52점으로 나타났다. 만점 대비 평균점수를 비교할 때 기관장의 복지행정리더십의 평균은 복지행정인력의 질 및 복지행정인력의 배치 등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 단체장의 복지마인드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정보화역량영역은 정보화보급 및 활용도로 구성되며 동 부문은 30점 만점에 16.94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보화보급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은 특화(자체)사업 실적과 민관협력사업 실적으로 구분되며 특화(자체)사업 실적은 23.33점 만점에 평균 12.78점, 민간협력사업 실적은 11.67점 만점에 6.32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주민의 특화된 복지욕구의 충족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특화사업의 발굴과 함께 민관의 협력 하에 다양한 자원 활용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을 말해준다.

2) 지표별 평가점수 분포

세 가지 영역별로 총 9개 지표의 평가점수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복지행정혁신역량 영역 중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의 평균은 3.68점으로 기관장의 조직개혁사례는 전체 4개 중에서 2~3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37.9%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62.1%의 비율을 보여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가 전체 지자체의 과반수를 상회하였다. 개혁사례가 없거나 1개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비율은 6.9%로 소수에 불과하였다.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의 평균은 3.39점으로 기관장의 인사개혁 사례는 전체 4개 중에서 2~3개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평균보다 낮은 지자체는 50.9%이었고, 평균보다 높은 지자체는 49.1%로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개혁사례가 없거나 1개에 해당하는 지자체의 비율은 20.3%로 전체 지자체의 5분의 1에 해당되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참여 실적은 평균 79.8%로 교육·

훈련에 참여한 비율이 55% 이상인 지자체는 85.8%이었고, 55% 미만인 지자체는 14.2%로 적지 않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업무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이 교육·훈련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사회복지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방자치단체 별로 균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20%는 교육·훈련의 기회에서 배제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복지부서 전체 공무원 대비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은 평균 42.5%이었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비율이

40% 이상인 지자체는 60.3%이었고, 나머지 39.7%는 40% 미만의 비율을 보였다. 따라서 과반수이상의 지자체는 사회복지부서에 근무하는 인력의 5분의 2 이상이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었으나, 지자체의 40%는 전문 인력의 구성이 그보다 낮아서 복지업무 수행에 전문성이 떨어질 것이 예상된다.

정보화역량영역의 행정정보시스템 활용률은 구·시·군 단위의 복지행정시스템에서 사용하는 DB의 전체 테이블 수 대비 2006년 1회 이상 갱신(update)이 발생한 테이블의 비율을 말한다. 동 지표의 전국 평균은 66.9%로 과반수

표 3.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명)

평가지표	척도	비율
A1-1)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a)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실시 b) 우수시설 포상제 실시 여부 c) 전년대비 특화사업 증가 d) 사회복지(조직)의 미션, 비전 등 제시 여부	
	⑤ 4개 해당	12.93
	④ 3개 해당	49.14
	③ 2개 해당	31.03
	② 1개 해당	6.47
	① 해당사례 없음	0.43
A1-2) 기관장의 인사 개혁 실적	a) 복지관련 포상건수가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10% 이상 b) 자원봉사실적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근무평정에 반영 c) 일반직 승진을 대비 사회복지직 승진율이 동일하거나 높음 d) 복지직공무원 및 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해외연수 실시	
	⑤ 4개 해당	12.07
	④ 3개 해당	37.07
	③ 2개 해당	30.60
	② 1개 해당	18.53
	① 해당사례 없음	1.72

표 2. 복지행정혁신분야의 평가영역 및 평가내용별 종합점수

(단위: 점)

평가영역	평가내용	만점	최고	최저	평균	표준편차
복지행정혁신역량	기관장의 복지행정리더십	17.50	17.50	5.25	12.37	2.613
	복지행정 인력의 질	8.75	8.75	1.75	6.80	2.044
	복지행정 인력의 배치	8.75	8.75	1.75	6.52	2.059
정보화역량	정보화보급 및 활용도	30.00	27.00	6.00	16.94	4.320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	특화(자체)사업 실적	23.33	23.33	4.67	12.78	5.142
	민관협력사업 실적	11.67	11.67	2.33	6.32	3.213

〈표 3〉 계속

평가지표	척 도	비율
A2-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 훈련참여 실적	(교육·훈련 참여인원 수÷사회복지직 공무원 수)×100	
	⑤ 95% 이상	40.09
	④ 75~95% 미만	27.16
	③ 55~75% 미만	18.53
	② 35~55% 미만	9.91
	① 35% 미만	4.31
	교육·훈련 참여인원(32,32)명÷사회복지직 공무원 수(40,38)명×100=(79.79)%	
A3-1) 사회복지직 배치수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사회복지 부서 전체 공무원 수)×100	
	⑤ 50% 이상	33.62
	④ 40~50% 미만	26.72
	③ 30~40% 미만	22.84
	② 20~30% 미만	12.50
	① 20% 미만	4.31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13,80)명÷사회복지 부서 전체 공무원 수(33,36)명×100=(42.48)%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이상의 지자체에서 정보 갱신이 발생하였음을 말한다. 전국 평균보다 5% 이상인 지자체가 18.1%, 전국평균 보다 5% 이하와 -5% 사이에 있는 지자체는 60.3%로 과반수이상의 지자체가 이 범위 내에 해당되었고, 전국평균보다 -5% 이하는 21.6%의 분포를 보였다.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은 지역사회 내에 설치되어있는 노인, 장애인, 아동 관련 사회복지기관 대비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기관의 비율을 말한다. 동 지표의 전국 평균은 60.8%로 대상기관의 과반수이상이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였으며, 나머지 39.2%는 시설운영 및 관리 업무 등이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지자체별 분포를 보면 전국 평균 이상의 정보시스템 보급률로 측정된 지자체는 약 54%를 차지하였고, 평균 이하인 지자체는 약 46%에 이르

고 있다. 2006년 1년간 구·시·군이 자체적으로 수행한 지역복지특화사업건수는 전국 평균이 9.2건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방분권화 시대에 지역복지 증진 차원에서 복지대상 및 욕구별로 차별적이고 특화된 사업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지역복지특화사업이 활발하게 수행된 수준은 아니다. 전국 평균보다 40% 이상의 특화사업을 수행한 지자체는 24.6%이었고,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와 -40% 사이에 있는 지자체는 40.5%로 지자체의 5분의 2가 이 범위 내에 해당되었으며,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는 34.9%의 분포를 보였다. 전체 사회복지예산 대비 지역복지특화사업의 비율은 전국 평균이 1.72%로 사회복지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분

표 4. 정보화역량영역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수, 개소수)

평가지표	척 도	비율
B1-1)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갱신(update)된 DB 테이블 수÷전체 사용 DB 테이블 수)×100	
	⑤ 전국평균+10% 이상	4.74
	④ 전국평균+5~+10% 미만	13.36
	③ 전국평균±5% 미만	60.34
	② 전국평균-5~-10% 미만	15.95
	① 전국평균-10% 이하	5.60
	갱신(update)된 DB 테이블 수(177.25)÷전체 사용 DB 테이블 수(265.00)×100=(66.89)%	
B1-2)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정보시스템 사용기관 수÷해당 사회복지기관 수)×100	
	⑤ 100%	7.33
	④ 80~100% 미만	21.12
	③ 60%~80% 미만	25.86
	② 40%~60% 미만	24.57
	① 40% 미만	21.12
	정보시스템 사용기관 수 (20.06)개소÷해당 사회복지기관 수(30.94)개소×100=(60.80)%	

주: ()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포를 보면 전국평균보다 40% 이상인 지자체는 19.0%이었고,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와 -40% 사이에 있는 지자체는 27.6%, 전국 평균보다 -40%이하는 53.5%로 과반수이상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중 -80% 이하가 27.2%로 지자체의 5분의 1 이상이 해당된다. 2006년 1년간 구·시·군이 민간 사회복지시설과 공동으로 추진한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전국 평균 7.8건으로 다수의 지자체에서 민간과 공동으로 협력사업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별 분포를 보면 전국평균보다 40% 이상인 지자체는 26.3%이었고,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와 -40% 사이에 있는 지자체는 25.4%,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는 48.3%로 거의 과반수의 분포를 보였으며, 그중

-80% 이하가 24.1%로 지자체의 5분의 1 이상이 해당된다.

3) 지역별 평가점수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 중 기관장의 조직개혁실적은 개혁사례가 3~4개인 비율은 대도시 71.6%, 중·소도시 59.7%, 농·어촌 55.6% 등이었고, 개혁사례가 1~2개인 비율은 농·어촌이 43.2%, 중·소도시 40.3%, 대도시 28.4% 등이었다. 또한 개혁사례가 없는 비율은 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았으며 농·어촌만이 1.23%의 분포를 보였다.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은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농·어촌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인사

표 5.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의 평가점수 분포

(단위: %, 건, 천원)

평가지표	척 도	비율
C1-1) 특화사업 건수	특화사업 건수	
	⑤ 전국평균+80% 이상	14.22
	④ 전국평균+40~+80% 미만	10.34
	③ 전국평균±40% 미만	40.52
	② 전국평균-40~-80% 미만	25.43
	① 전국평균-80% 이하	9.48
2006년 (9.2)건		
C1-2)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특화사업 결산액÷사회복지 결산액)×100	
	⑤ 전국평균+80% 이상	15.09
	④ 전국평균+40~+80% 미만	3.88
	③ 전국평균±40% 미만	27.59
	② 전국평균-40~-80% 미만	26.29
	① 전국평균-80% 이하	27.16
특화사업결산액(680,132.03)천원÷사회복지결산액(44,690,864.64)천원×100=(1.72)%		
C2-1) 민관협력사업 건수	민관협력사업 건수	
	⑤ 전국평균+80% 이상	16.81
	④ 전국평균+40~+80% 미만	9.48
	③ 전국평균±40% 미만	25.43
	② 전국평균-40~-80% 미만	24.14
	① 전국평균-80% 이하	24.14
2006년 (7.8)건		

주: ()안의 수치는 전국평균임.

개혁실적은 개혁 사례가 3~4개인 비율은 대도시 56.8%, 중·소도시 50.7%, 농·어촌 40.7% 등이었고, 개혁 사례가 1~2개인 비율은 농·어촌이 58.0%, 중·소도시 45.5%, 대도시 43.3% 등이었다. 또한 개혁 사례가 없는 비율은 대도시지역은 해당되지 않았으며 중·소도시는 3.90%, 농·어촌은 1.23%의 분포를 보였다.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은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농·어촌이 가장 미흡하였다. 사

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참여 실적이 55% 이상인 비율은 대도시가 87.8%이었고 중·소도시 87.0%, 농·어촌은 82.7% 순으로 높았다. 55% 미만인 비율은 농·어촌이 17.3%, 중·소도시 13.0%, 대도시 12.2%이였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참여 실적은 대도시가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이였으며, 농·어촌이 가장 낮았다. 사회복지직 배치수준이 30% 이상인 경우는 농·어촌

이 92.6%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30% 미만인 비율은 대도시가 31.1%, 중·소 87.0%, 대도시 68.9% 등의 순이었다. 그리고 도시 13.0%, 농·어촌이 7.4%의 분포를 보였

표 6.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단위: %)

평가지표	척 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1-1)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a)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실시 b) 우수시설 포상제 실시 여부 c) 전년대비 특화사업 증가 d) 사회복지(조직)의 미션, 비전 등 제시 여부			
	⑤ 4개 해당	27.03	9.09	3.70
	④ 3개 해당	44.59	50.65	51.85
	③ 2개 해당	24.32	36.36	32.10
	② 1개 해당	4.05	3.90	11.11
	① 해당사례 없음	-	-	1.23
A1-2) 기관장의 인사개혁 실적	a) 복지관련 포상건수가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10% 이상 b) 자원봉사실적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근무평정에 반영 c) 일반직 승진을 대비 사회복지직 승진율이 동일하거나 높음 d) 복지직공무원 및 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해외연수 실시			
	⑤ 4개 해당	16.22	12.99	7.41
	④ 3개 해당	40.54	37.66	33.33
	③ 2개 해당	27.03	29.87	34.57
	② 1개 해당	16.22	15.58	23.46
	① 해당사례 없음	-	3.90	1.23
A2-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참여 실적	(교육·훈련 참여인원 수÷사회복지직 공무원 수)×100			
	⑤ 95% 이상	48.65	35.06	37.04
	④ 75~95% 미만	25.68	28.57	27.16
	③ 55~75% 미만	13.51	23.38	18.52
	② 35~55% 미만	6.76	11.69	11.11
① 35% 미만	5.41	1.30	6.17	
A3-1)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사회복지직 공무원 수÷사회복지 부서 전체 공무원 수)×100			
	⑤ 50% 이상	27.03	31.17	41.98
	④ 40~50% 미만	21.62	27.27	30.86
	③ 30~40% 미만	20.27	28.57	19.75
	② 20~30% 미만	18.92	12.99	6.17
① 20% 미만	12.16	0.00	1.23	

다. 사회복지부서 내 사회복지직 배치수준은 농·어촌이 가장 높았고, 대도시 지역이 가장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서 대도시 지역의 경우 사회복지 업무 수행상 전문성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 기관장의 조직개혁사례별 평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실시한 비율은 대도시가 85.1%, 중·소도시 70.1%, 농·어촌이 60.5%로 대도시와 중·소도시에 비하여 농·어촌은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다. 우수시설 포상제 실시율은 대도시가 35.1%, 중·소도시 11.7%, 농·어촌이 4.9%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도시가 중·소도시의 3배, 농·어촌의 7배나 높은 수준을 보여 지역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년대비 특화사업 증가는 농·어촌이 87.7%로 전년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소도시 85.7%, 대도시 82.4% 순이었으며 지역간에 차

이가 적었다. 사회복지(조직)의 미션, 비전 등을 제시한 비율은 중·소도시가 97.4%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92.6%, 대도시는 91.9%로 지역간에 차이가 적은 편이었다. 기관장의 인사개혁사례별 평균을 보면, 복지관련 포상건수가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대비 10% 이상인 비율은 대도시가 63.5%, 중·소도시 61.0%, 농·어촌이 59.3%로 전반적으로 과반수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었으며 지역간의 차이가 적었다. 자원봉사실적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비율은 대도시가 29.7%, 농·어촌 18.5%, 중·소도시 18.2%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도시와 농·어촌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일반직 승진율 대비 사회복지직 승진율이 동일하거나 높다는 비율은 대도시가 77.0%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중·소도시 76.6%, 농·어촌이 65.4% 순이었으며 도시와 농·어촌 간에 약간의 차이를 보

였다. 복지직공무원 및 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해외연수를 실시한 비율은 대도시가 86.5%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84.4%, 농·어촌 79.0%로 지역간에 차이가 적었다.

지역별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참여율의 평균은 대도시지역이 83.5%로 전체 평균인 79.8%보다 높았고, 중·소도시(79.3%)와 농·어촌(76.9%)은 전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2006년²⁾과 2007년을 비교하면 동 비율은 대도시가 23.1%포인트, 중·소도시 20.9%포인트, 농·어촌이 11.2%포인트 증가하였다. 이는 2006년의 평가결과가 2007년에 반영되어 개선된 결과로 이해된다.

지역별로 사회복지직 배치수준은 농·어촌

이 46.9%, 중·소도시 42.6%로 전체 평균인 42.5%보다 높은 수준을 보인 반면, 대도시는 37.6%로 전체 평균보다 4.9%포인트 낮았다. 사회복지직 배치수준은 농·어촌과 대도시간에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동 비율은 대도시가 6.6%포인트, 중·소도시 2.9%포인트, 농·어촌이 9.6%포인트 증가하여 복지업무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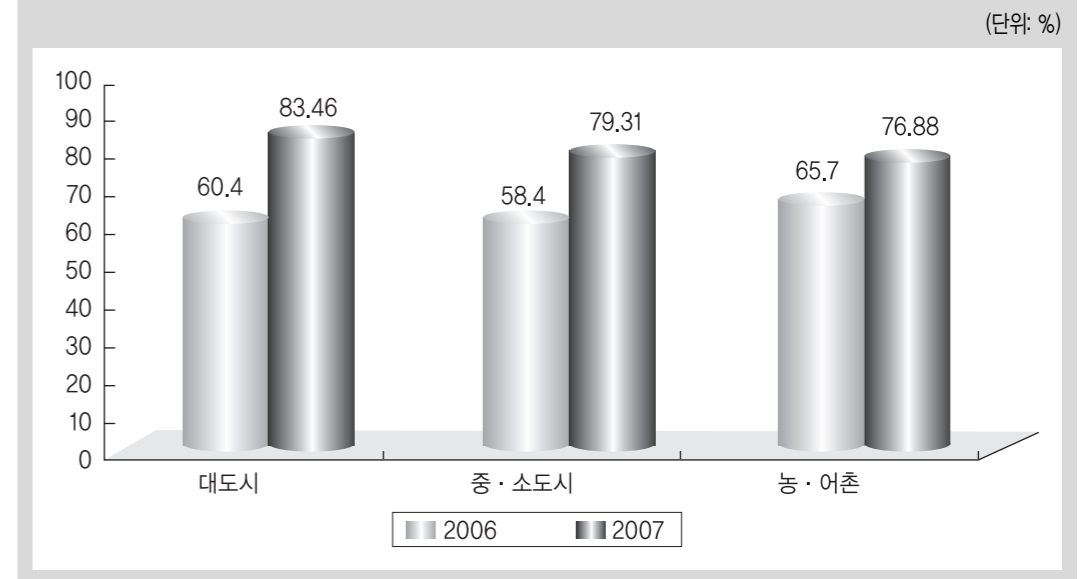
정보화역량영역 중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은 전국평균보다 5% 이상인 비율은 중·소도시가 37.7%로 가장 높았고 농·어촌 9.9%, 대도시 6.8%로 중·소도시와 대도시, 중·소도시와 농·어촌 간의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전국 평균보다 5% 이하와 -5%

표 7. 기관장의 조직개혁실적 및 인사개혁실적의 지역별 분포

평가지표	척도	(단위: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A1-1) 기관장의 조직개혁 실적	a) 사회복지시설·기관 등에 정기적인 자원봉사활동 실시	85.1	70.1	60.5
	b) 우수시설 포상제 실시 여부	35.1	11.7	4.9
	c) 전년대비 특화사업 증가	82.4	85.7	87.7
	d) 사회복지(조직)의 미션, 비전 등 제시 여부	91.9	97.4	92.6
A1-2) 기관장의인사 개혁 실적	a) 복지관련 포상건수가 전체 사회복지직 공무원 대비 10% 이상	63.5	61.0	59.3
	b) 자원봉사실적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근무평정에 반영	29.7	18.2	18.5
	c) 일반직 승진율 대비 사회복지직 승진율이 동일하거나 높음	77.0	76.6	65.4
	d) 복지직공무원 및 복지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규 교육프로그램 또는 해외연수 실시	86.5	84.4	79.0

주: 대도시 74, 중·소도시 77, 농·어촌 81개 중 각각 척도에 해당되는 비율임.

그림 1.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 참여율 비교(2006~2007)



2) 2006년 자료는 2006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중 복지행정혁신분야 평가 결과임.

표 8.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비교(2006~2007)

(단위: %)

평가지표	지역	2006년			2007년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A3-1) 사회복지직 배치 수준	대도시	73.7	3.9	31.0	61.29	8.82	37.56
	중·소도시	100.0	18.2	39.7	75.00	23.81	42.60
	농·어촌	66.7	5.9	37.3	80.00	17.39	46.86

사이에 있는 비율은 대도시가 66.2%, 중·소도시 61.0%, 농·어촌이 54.3%로 지자체의 과반 수이상 이 범위 내에 해당되었다. 전국 평균보다 -5% 이하는 농·어촌이 35.8%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대도시가 27.0%이었고, 중·소도시는 1.3%로 극히 미미하였다.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보급률이 60% 이상인 경우는 대도시가 75.7%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중·소도시 48.1%, 농·어촌 40.7% 순이었다. 60% 미만인

경우는 농·어촌이 59.3%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가 52.0%, 대도시가 24.3%이었다. 이와 같은 평가결과는 사회복지기관을 지원하는 지자체 간의 차이도 있으나 대도시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채용규모 및 운영관리 등의 여건이 충분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복지행정인력의 행정정보시스템활용률은 중·소도시가 69.6%로 전체 평균인 66.9%보다

높았고, 대도시 65.9%, 농·어촌은 65.2%로 전체 평균보다 낮았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동 비율은 대도시가 3.3%포인트, 중·소도시가 4.1%포인트, 농·어촌이 4.4%포인트 증가하여 복지수혜대상자의 관리가 체계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보급률은 대도시가 74.4%로 전체 평균인 60.8% 보다 높았으나, 중·소도시는 57.1%, 농·어촌은 51.9%로 전

체 평균보다 낮았다.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은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도시와 농·어촌지역간에 편차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동 비율은 대도시가 1.2%포인트, 중·소도시가 7.2%포인트, 농·어촌이 0.4%포인트 감소하였다. 이는 2007년 노인분야의 정보시스템의 범위가 국가 정보시스템으로 강화된 결과로 설명된다.

지역 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 중에서 2006년

그림 2.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비교(2006~2007)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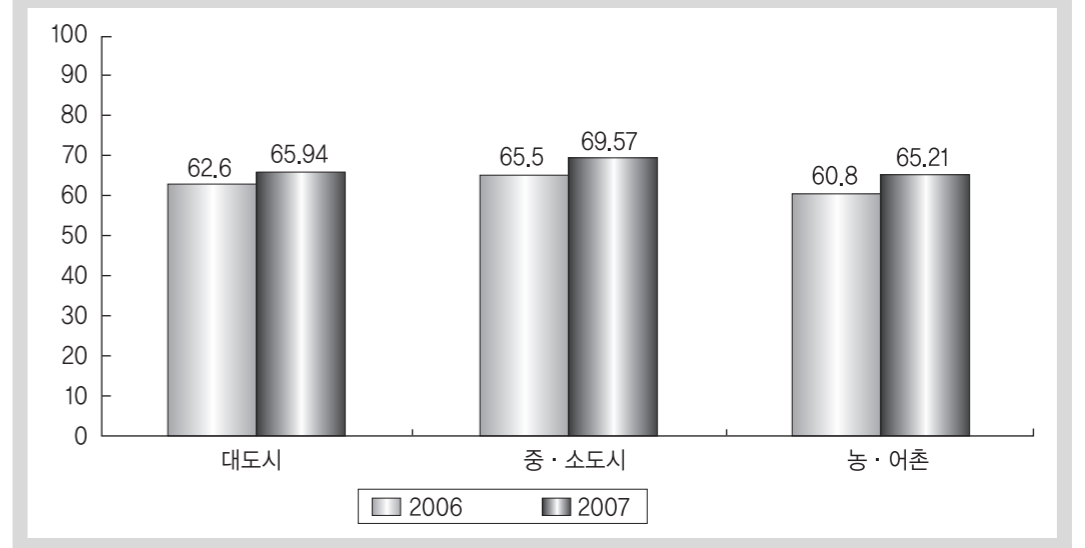


표 9. 정보화역량영역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단위: %)

평가지표	척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B1-1) 복지행정 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	⑤ 전국평균+10% 이상	1.35	11.69	1.23
	④ 전국평균+5~+10% 미만	5.41	25.97	8.64
	③ 전국평균±5% 미만	66.22	61.04	54.32
	② 전국평균-5~-10% 미만	21.62	1.30	24.69
	① 전국평균-10% 이하	5.41	0.00	11.11
(정보시스템 사용기관 수÷해당 사회복지기관 수)×100				
B1-2)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⑤ 100%	10.81	3.90	7.41
	④ 80~100% 미만	40.54	15.58	8.64
	③ 60~80% 미만	24.32	28.57	24.69
	② 40~60% 미만	20.27	27.27	25.93
	① 40% 미만	4.05	24.68	33.33

표 10.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비교(2006~2007)

(단위: %)

평가지표	지역	2006년			2007년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B1-2)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	대도시	100.0	0.00	75.6	104.35	23.68	74.44
	중·소도시	100.0	0.00	64.3	100.00	0.00	57.10
	농·어촌	100.0	0.00	52.3	100.00	0.00	51.87

1년간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40% 이상인 비율은 대도시가 27.0%, 중·소도시가 26.0%로 비슷한 수준을 보였으며 농·어촌은 21.0%로 도시지역보다 다소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와 -40% 사이에 있는 비율은 농·어촌이 46.9%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39.0%, 대도시 35.1%로 농·어촌 지역이 도시지역보다 높았다.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인 비율은 대도시지역이 37.8%, 중·소도시 35.1%, 농·어촌이 32.1%로 지역 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지역복지특화사업에 산규모 즉, 사회복지결산액 대비 특화사업결산

액의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40% 이상인 경우는 농·어촌이 21.0%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18.2%, 대도시 17.6% 순으로 농·어촌지역이 도시보다 다소 높았다.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와 -40% 사이에 있는 비율은 농·어촌이 33.3%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31.2%, 대도시 17.6%로 농·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은 비슷한 수준으로 높았으나 대도시 지역은 농·어촌과 중·소도시에 비해서 상당히 낮았다.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인 비율은 대도시가 64.9%이었고, 중·소도시 50.7%, 농·어촌은 45.7%의 분포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특화사업

건수에 비하여 예산이 낮게 편성된 지역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지역으로 나타나서 예산확대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2006년 1년간 민관협력사업건수는 전국 평균보다 40% 이상인 비율은 대도시가 41.9%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29.9%, 농·어촌이 8.6% 순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 대도시와 농·어촌 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와 -40% 사이에 있는 비율은 농·어촌이 25.9%로 가장 높았고, 대도시 25.7%, 중·소도시 24.7%로 지역간의 차이가 미미하였다. 전국 평균보다 -40% 이하인 비율은 농·어촌이 65.4%로 가장 높았고, 중·소도시 45.5%, 대도시 32.4%로 농·어촌이 대도시보다 2배 높았다.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한 건수는 대도시가 가장 많았고, 농·어촌이 가장 적었다. 향후 다

양한 지역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으로 민관협력사업이 확대되어야 하며 중·소도시와 농·어촌은 배가의 노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는 중·소도시가 9.8건, 대도시 9.4건으로 전국 평균인 9.2건보다 많았으나, 농·어촌은 8.4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지역복지특화사업 건수는 중·소도시 지역이 가장 많았고, 농·어촌지역이 가장 적었으나 대도시와 농·어촌 지역간에 차이는 미미하였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동 건수는 대도시가 4.4건, 중·소도시가 2.2건, 농·어촌이 3.2건이 증가하여서 지역주민의 복지욕구 증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전체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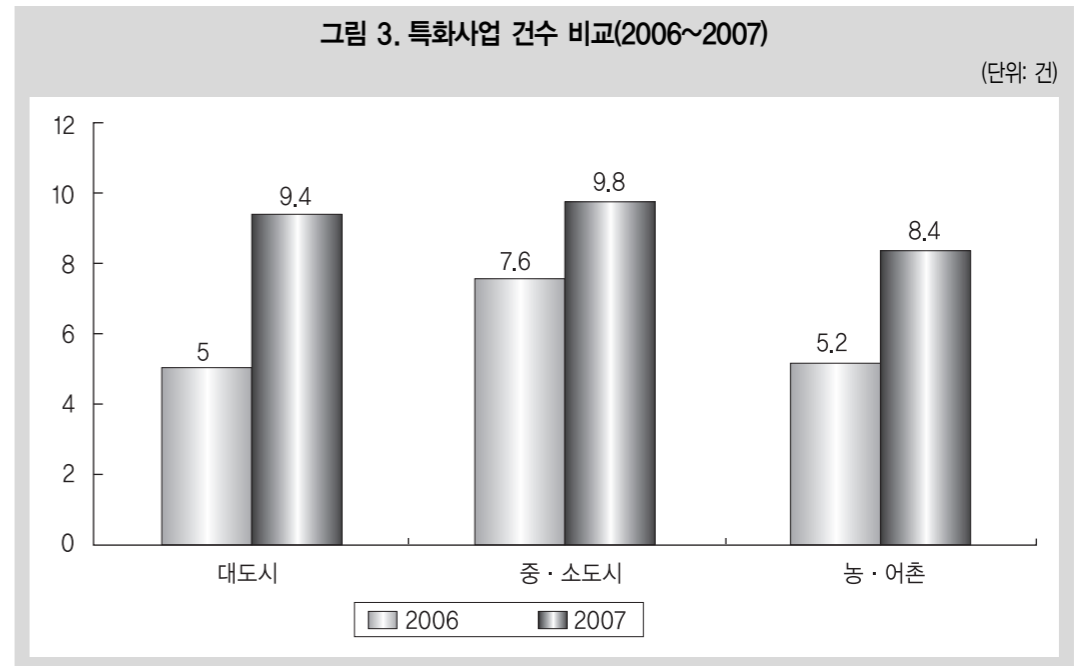
표 11.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의 지역별 평가점수 분포

(단위: %)

평가지표	척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C1-1) 특화사업 건수	특화사업 건수			
	⑤ 전국평균+80% 이상	16.22	16.88	9.88
	④ 전국평균+40~+80% 미만	10.81	9.09	11.11
	③ 전국평균±40% 미만	35.14	38.96	46.91
	② 전국평균-40~-80% 미만	27.03	23.38	25.93
	① 전국평균-80% 이하	10.81	11.69	6.17
C1-2)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특화사업 결산액÷사회복지 결산액)×100			
	⑤ 전국평균 +80% 이상	13.51	12.99	18.52
	④ 전국평균 +40~+80% 미만	4.05	5.19	2.47
	③ 전국평균 ±40% 미만	17.57	31.17	33.33
	② 전국평균 -40~-80% 미만	25.68	19.48	33.33
	① 전국평균 -80% 이하	39.19	31.17	12.35
C2-1) 민관협력사업 건수	민관협력사업 건수			
	⑤ 전국평균 +80% 이상	29.73	16.88	4.94
	④ 전국평균 +40~+80% 미만	12.16	12.99	3.70
	③ 전국평균 ±40% 미만	25.68	24.68	25.93
	② 전국평균 -40~-80% 미만	18.92	23.38	29.63
	① 전국평균 -80% 이하	13.51	22.08	35.80

그림 3. 특화사업 건수 비교(2006~2007)

(단위: 건)



비율은 농·어촌이 2.09%로 전국 평균인 1.72%보다 높았고, 대도시 1.57%, 중·소도시가 1.46%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지역복지특화사업의 예산규모는 농·어촌지역과 도시지역 간에 약간의 편차를 보였다. 지역별로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동 비율은 대도시와 농·어촌이 각각 0.4%포인트, 1.2%포인트가 증가한 반면, 중·소도시는 0.4%포인트가 감소하여 지역별로 차이를 보였다. 민관협력사업 건수는 대도시 12.1건으로 전체 평균인 7.8건보다 높았으나 중·소도시는 7.6건, 농·어촌은 4건으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민관협력사업의 수행이 중·소도시와 농·어촌에서 낮은 것은 지역사회 내에 민간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지역별로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동 건수는 대도시가 10.6건, 중·소도시가 6.4건, 농·어촌이 3.1건이 증가하였다. 이는 2006년에 비해 민관협력사업 대상의 범위가 확대된 점을 감안하여도 지역복지자원 개발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잘 나타나고 있다.

4. 정책제언

본 고에서는 2007년 지방자치단체 복지종합평가 중 복지행정혁신분야에 대한 평가결과를 살펴보았다. 복지행정혁신분야는 세 가지 영역 9개 지표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였다. 동 지표들을 통해 나타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

복지행정혁신역량영역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기관장의 조직개혁실적 및 인사개혁실적은 4개 사례 중에서 약 2~3개의 개혁사례를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어 기관장의 복지행정리더십이 저조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우수시설을 대상으로 포상제를 실시하는 지자체의 비율은 17%에 불과하여 지역사회내의 사회복지자원의 관리차원에서 지자체의 노력이 상당히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자원봉사실적 또는 후원금 기부행위를 근무평정에 반영하는 지자체

의 비율은 22%에 불과하여 다수의 지자체에서 공무원의 복지마인드를 공무원의 역량 평가 기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지방분권화가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서 구·시·군의 복지수준은 단체장의 복지마인드, 개혁의지 및 역량에 따라 다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구·시·군의 복지행정수준의 제고를 위해서 기관장의 복지행정혁신 역량이 증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지역사회 내 사회복지기반의 강화와 질적 제고를 위해서 지자체별로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등을 대상으로 각종 인센티브제도를 개발하고, 또한 사회복지직 업무의 질적 제고를 위해서 각종 포상제, 승진 등의 인센티브제도 등도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교육훈련참여 실적은 평균 79.8%로 산출되어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약 20%는 교육·훈련 과정에서 배제되어 전문적인 복지행정 업무수행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각종 연찬회, 세미나, 학술대회, 워크숍 등의 교육·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하고, 그 내용도 직무 및 기능 위주에서 벗어나 복지관련 전문지식 등이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배치수준은 42.5%로 사회복지부서 전체 공무원의 과반수 이상은 비전공자들로 구성되어서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복지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사회복지부서 내 전문인력 배치가 확대되어야 하며 이는 구·시·군 단체장의 복지철학과 실천의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선행적으로 기관장의 자질강화가 요구된다.

2) 정보화역량영역

정보화역량영역의 평가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복지행정인력의 행정 정보시스템 활용률은 66.9%로 지자체 별로 복지수혜자의 정보갱신이 필요치 않은 비율을 고려하더라도 행정 정보시스템의 활용률은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지자체별로 복지수혜대상자의 선정 및 관리 등 복지서비스의 효율적인 수행과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행정 정보시스템의 활용도가 극대화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복지수혜대상자 대비 사회복지인력의 균형적 배치가 병행될 때 가능할 것이다. 사회복지기관 정보시스템 보급률은 60.8%로 산출되었는데, 이는 나머지 40%의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인사, 회계, 서비스 등의 업무가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동 지표는 지역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나서 지자체 별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관심과 지원상에 차이가 있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운영과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하여 지자체 별로 사회복지시설의 정보시스템 보급 확대를 위한 지원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3)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

지역복지특화사업역량영역의 평가결과를 살펴보면, 특화사업 건수는 1개 구·시·군 당 평균 9.2개를 수행한 것으로 평가되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하는 특화사업은 소극적으로 수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별로 지역복지특화사업의 개

표 12.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및 민관협력사업건수 비교(2006~2007)

(단위: %, 건)

평가지표	지역	2006년			2007년		
		최고	최저	평균	최고	최저	평균
C1-2)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	대도시	9.2	0.00	1.2	14.44	0.00	1.57
	중·소도시	28.5	0.00	1.9	7.23	0.00	1.46
	농·어촌	7.6	0.00	0.9	16.71	0.00	2.09
C2-1) 민관협력사업 건수	대도시	9	0.00	1.5	34.00	0.00	12.12
	중·소도시	6	0.00	1.2	34.00	0.00	7.62
	농·어촌	5	0.00	0.9	22.00	0.00	4.01

발과 추진에 보다 큰 관심이 집중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창의적인 사업 아이템 개발을 위해서 사회복지부서 전 공무원이 아이디어 개발을 위한 노력에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선진 복지시설 방문, 관련 세미나 참석, 정규교육의 활성화를 비롯하여 민간 복지기관의 외부지원 프로그램 등을 벤치마킹하여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특화 프로그램의 개발 등도 방안이 될 수 있다. 사회복지 결산액 대비 특화사업 결산액 비율은 전국 평균이 1.72%로 낮았다. 향후 복지사업이 지방으로 이

양되면서 지역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복지수준의 격차가 벌어질 것을 예상할 때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서 특화사업 부분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각 지자체는 열악한 재정수입의 구조에서 별도의 자체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지역주민을 위한 특화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관내 학교, 기업체, 법인 등 다양한 민간재원을 개발하여 지역복지특화사업의 재원을 마련하는데 적극적인 홍보와 유인책 등을 강구한다. **본문**